

Check it~!
2011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11년 세계 시장의 3대 화두 / 3

II. 2011년 지역별 경제 전망 / 7

III. 주요 국가별 2011년 핵심 이슈 / 17

17	1. 북미
21	2. 중국권
26	3. 일본
29	4. 아시아
38	5. 유럽
50	6. CIS
53	7. 중남미
58	8. 중동
69	9. 아프리카

요 약

2011년 어려운 세계시장 상황에서 위협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로 3E(Energy, Environment-Friendly/Economic Cooperation, Inter-Regional/Emerging Marketplaces)가 화두로 대두

1 친환경 에너지(Energy, Environment-Friendly)

- 2011년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은 각국의 선순위 정책 어젠다
 - 캐나다, 가솔린과 디젤에 신재생 연료 성분 2% 이상 포함 의무화
 - 일본, CO2 배출 억제를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세' 도입
 - EU, 2011년부터 新EU 에너지 라벨제도 도입
 - 핀란드·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시행
 - 중국,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집중 육성
 - UAE, 에너지 과소비 전기·전자제품 판매 불허

2 지역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Inter-Regional)

- FTA 중심의 경제통합 통해 수출시장 확대 기여
 - '한-EU FTA' 2011년 7월 1일부 발효
 - EU내 관세율 높은 우리 주력 수출상품 진출 확대 유리
 - 중국·일본은 EU와 FTA 미체결 상태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
 - '한-미 FTA' 2011년 발효 예상
 - 관세인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품목의 수혜 클 것
 - '한-호 FTA', '한-터키 FTA'는 순조롭게 타결 기대
- 경쟁국들의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우리 수출시장 위협
 - 중국, 2010년 '중-아세안 FTA', '중-대만 ECFA'는 1.1일부 발효
 - 일본, 2010년부터 과거 미온적이었던 경제교류협정에 적극적인 태도 전환
 - '일본-인도 EPA' 협상 완료, TPP 협의 시작 표명

3 신흥 시장(Emerging Marketplaces)

- 신흥 시장의 경제성장 및 수출시장 확대 전망
 - 2011년, 선진국보다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확실한 성장 예견
 - 중국 8%, 아세안 5%, 중동 5%, 중남미 4% 대의 견실한 성장세 시현
 - 아세안, 남미 등 역내외 교역활성화 및 소비시장 확대 전망
 - 남미,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 브라질, 월드컵 대비 고속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중동,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부양 및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전망

<2011년 지역별 핵심 이슈>

지역	핵심 이슈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주축의 신규 의회 출범 ○ 미,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의회 비준 청신호 ○ 캐, 정부 리콜 권한 강화할 '소비자제품 안전법' 발효
중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12·5규획(2011~2015) 실시 -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포용성장 강조 ○ 중국,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대내개방 조치 추진 ○ 대만,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 및 후속 협상 전개 ○ 홍콩, 중국 선전(深圳)과 금융, 물류 통합 가속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연계협정(EPA)' 적극 추진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생산성 향상 및 혁신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 인도네시아, 2011년부터 자동차 등 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 ○ 인도, FTA 네트워크 확대(일본, EU) ○ 호주, 한-호 수교 50주년 맞아 FTA 체결 기대 ○ 뉴질랜드, 오클랜드 광역市 출범으로 인프라 개발 수요 급증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발효로 우리기업 수출 경쟁여건 개선 ○ 新EU 에너지 라벨 시행(기존 7개 품목에 TV 추가, 2월) ○ EU, 60W 이상 백열구 판매금지(9월) ○ 영국, 부가세 인상 및 공공부문 감축으로 서민생활 이중고 예상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WTO 가입 예상 ○ 우즈벡, 민간 중소기업 통합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확대 추진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2011년 경제 성장률 4.5% 전망 ○ 개발도상국간特惠무역제도 협정(GSTP) 상파울루 라운드 타결 ○ 브라질, 대형 국책사업 본격 추진 전망 ○ 칠레, 구리가격 상승 및 구리 생산확대에 따른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급증 ○ 아르헨, 수입 규제 강화 전망 ○ 아르헨, 원전도입 등 대규모 입찰 시행 예정 ○ 파나마, 2011년 '한-파 FTA' 협상 개시 예정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신용공급·부채 재조정·부동산 공급 초과 ○ 사우디, 본격적인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시대 개막 ○ 이란, 식량 등 생필품 보조금 제도 폐지 ○ 이집트, 인프라 사업 분야 민간 사업자 확대 전망 ○ 이라크, 신내각 구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순항 전망 ○ 요르단, 수입 중고차 연식 10년 이내로 전환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단, 남부 수단 분리 독립 전망 ○ 동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확대 ○ 남아공, 탄소세 시행 초읽기

I. 2011년 세계시장의 3대 화두

2011년 세계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을 내재한 채 밝은 면 보다는 어두운 경기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좀처럼 북미 선진국에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유럽 각국들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로 갈수록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여타 국들 역시 각종 조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으로 각국 소비자들의 지출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비관세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시장의 복잡한 위협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3E (Energy, Environment-friendly/Economic Cooperation, Inter-Regional/Emerging Marketplaces)가 화두로 제시 되고 있다.

1 친환경 에너지(Energy, Environment-Friendly)

2011년에도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는 중요한 정책 어젠더로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는 가솔린과 디젤에 신재생 연료 성분 2% 이상 포함을 의무화 할 것이며, 일본에서는 CO2 배출 억제를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핀란드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U는 2011년부터 新EU 에너지 라벨제도를 도입하며, 9월부터는 백열구의 판매가 금지된다. 역시 백열구 판매가 금지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절전형 LED 전구 무상교체 계획에 따라 동 제품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스위스에서는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존' 제도를 만들어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중국은 2011년 7대 신흥 전략산업 육성 계획 중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이 3개(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에 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는 유류세 및 가스세의 인상, UAE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 과소비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불허하기로 해 에너지 절약 상품이 각광받을 것이다.

UAE에서는 WFES(World Future Energy Summit)회의가 1월에 개최, 에너지 문제 해결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개발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우디에서는 2011년 1분기 중 '원자력 재생에너지 연구원(KACNRE)'이 공식 발족돼,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속속 발주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리아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 10억 유로(풍력 5억 유로, 태양광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남아공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세 초안을 승인, 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 지역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Inter-Regional)

지난 수년간 우리가 주력해온 FTA 중심의 경제통합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세계 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가 드디어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들의 EU 관세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확대에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EU와 FTA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최소 3년 이상의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한-미 FTA도 지난 12월 추가협상 타결로 2011년 발효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어, 이로 인한 관세인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품목의 대미 수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50주년을 맞아 체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호 FTA 및 EU와 관세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와의 FTA도 순조로운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경쟁국이자 주요 시장인 중국, 대만, 일본 등 역시 다양한 종류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이미 중-아세안 FTA를 발효 인구 19억의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한 바 있으며, 중국-대만간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일부 품목의 무관세화가 실시된다. 다행히 1차 무관세화 품목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우리제품과의 경쟁제품이 적었으나,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만과 경합도가 높은 LCD 등의 제품이 무관세화 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우려된다.

과거 FTA 등 지역간 경제교류협정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던 일본은 2010년부터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 중으로 일본-인도 EPA(경제연계협정) 협상 완료,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 협의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그 변모된 움직임에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3

신흥시장(Emerging Marketplaces)

2011년 대부분 선진국 경제의 부진 전망과 대비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비교적 건전한 경제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10년 10% 내외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유지했던 중국은 2011년에도 8%대의 안정적 성장 및 4%대의 적정 수준의 물가관리를 통해 산업구조를 내실화

할 전망이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와 정보기술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한 아시아 경제는 2011년 5%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AFTA 및 중-아세안 FTA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효과로 역내외 교역 활성화 및 소비시장 경쟁 두드러질 전망이다. 단, 급격한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품질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미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중심으로 4%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자원개발 및 중산층 확대로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현지화 강세로 수입 수요가 확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력 상품 수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월드컵 개최로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공항, 호텔, 경기장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원전 및 각종 발전소 입찰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5%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및 국제 유가 상향 안정화로 중동 석유수출국들은 재정지출을 확대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다각화 정책으로 제조, 유통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많은 난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을 중심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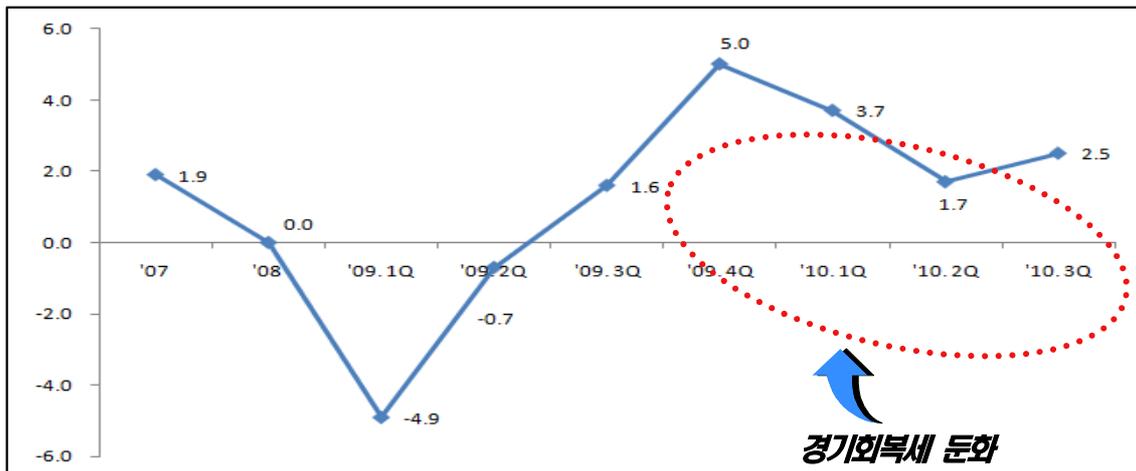
2. 2011년 지역별 경제 전망

1 북미 : Soft Patch는 지속되지만 對북미 수출 불확실성은 개선

○ Soft Patch¹⁾ 지속 : ‘느리고 고통스러운 경기회복’

- 미국에서는 고용 없는 경기 회복과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고용 시장과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어 경기 회복 속도 둔화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 :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10. 3분기는 추보치

자료원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10.3Q 성장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질 GDP(\$13.2조)는 여전히 前고점('07.4Q) 대비 0.6% 낮은 수준

- 캐나다 역시 2010.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5.8%) 대비 크게 하락한 2.0%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 속도 둔화(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하여, 2011년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공화당 주도 의회 출범, 한미 FTA 美의회 비준 청신호로 대미 수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감소 전망

1) '경기회복 국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뜻하는 말로서 앨런 그린스펀 前FRB 의장이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탈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미규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국경세 부과를 포함한 기후변화법안과 해외투자 미국 기업에 제공해 오던 세제혜택을 종료하는 과세이연법안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대폭 감소
- 한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미 의회 비준의 키를 쥐고 있는 주요 의원들이 지지 입장으로 급선화하면서, 이르면 내년 5월까지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제기

2

중국권 : 거시정책 정상화와 내수시장 활성화

가. 중국

- 2010년 중국경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견고한 펀더멘탈 유지
 - 경제성장률이 1분기 11.9%, 2분기 10.3%, 3분기 9.6%로 둔화 추세이나 기대치 보다 높은 수준 유지
- 2011년에도 제조업 등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동력과 건전한 펀더멘탈 유지
 -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정책기조 : 중국은 2011년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물가관리를 위해 거시정책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전망 (8% 경제성장, CPI 4%이내 목표)
 - 재정정책 : 2010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대폭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음.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와 정보기술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통화정책 : 2011년에는 통화정책의 중점방향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상품구조조정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부문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 2010년에 비해 긴축기조 유지 전망
 - 개방정책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 및 대내개방 확대
 - * 대내개방 :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 참여 선별적 허용

나. 대만

○ 대외경제협력체제 본격 가동 → 경제성장 엔진역할

-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와 후속 협상 추진,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추진
- 경협체제 본격화에 힘입은 수출 증진으로 2011년 대만 경제 성장(4.5%) 전망

다. 홍콩

○ 대외의존도 높은 홍콩경제, 2011년 급성장 어려움

- 2010년 홍콩 경제성장률은 6%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효력이 떨어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홍콩의 '11년 경제성장률은 4.5%가 될 전망
- 반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콩증시와 부동산으로의 꾸준한 외부자본 유입은 호조 요인임

3

일본 : 수출의 성장 동력 역할 약화, 성장률 감소

○ 2011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10년의 2.6%에서 1.2%로 급락하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 전환은 2012년 이후 가능할 전망

- 경기선행지수, 생산증가율, 재고순환도 등 주요 지표들의 경기 둔화 가능성
- 개인소비는 정책효과에 따라 당분간 조정기간을 거친 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
-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속도 감소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일본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약화 전망
-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공공투자는 대폭적인 감소세 전망
- 일본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경기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가. 동남아시아

- 2011년 아시아 경제는 성장속도 조절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예상
 -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6-10%대의 고속성장을 시현했던 아세안 경제가 2011년에 들어와서는 5%내외의 경제성장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AFTA 및 중-아세안FTA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효과의 본격화로 역내 교역 활성화 및 소비시장 경쟁 심화 전망
 - 그동안 체결되었던 FTA의 발효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성장과 맞물려 역내외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산층 소비시장 성장에 따른 서비스/유통 분야의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임
 - 아세안 국가 간 인프라 정비 및 국경무역 증가로 역내교역량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국경도시들의 거점형 성장이 빠르게 진행 될 것임
- FTA체결 이후 국내 시장과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 FTA체결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품질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통관심사 강화나 선적전 검사 도입과 같은 비관세 장벽들을 강화하려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지역의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 재 점화 예상
 - 세계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자원수요가 증가해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 동안 자원 개발 부문에서 뒤쳐져있던 미얀마, 라오스 등 미개척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출경쟁이 자원 확보 경쟁을 주도하게 될 것임
- 태국의 정치 불안과 베트남의 경제 불안 등이 지역경제 안정의 주요 변수

- 태국의 시위사태가 미봉적인 해결로 아직은 완전한 안정기로 들어서지 못했고, 베트남의 경우 동화 평가절하, 물가급등 및 공기업무채상환 등의 문제로 경제적 불안 가능성 상존

나. 인도

○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파른 임금인상

- 인도는 2009년과 2010년에 두 자리 수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임
-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매년 15%이상 임금이 인상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임금 인상이 계속될 전망
-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도 마찬가지로 여서 2010년 12월 수출가공구(EPZ)의 임금이 60% 인상된 데 이어 2011년에도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는 저임금벨트의 매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됨

5

유럽 : 기회(한-EU FTA)와 위기(재정위기)의 공존

○ 한-EU FTA, 2011년 7월 1일 발효

- EU는 세계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로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 높아 수출확대에 유리
 - * EU의 전품목 평균관세율은 5.2%로 미국(3.5%)보다 높으며(2007년 기준),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음
- 전체 품목의 97.3% 즉시 철폐, 2.1%는 3년내 철폐
- 中·日 등 경쟁국 대비 최소 3년 이상의 비교우위 확보
 - * 아직 중국과 일본은 EU와 FTA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으로 통상,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3년 이상 소요(한-EU FTA는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4년 2개월 소요)

○아일랜드 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

-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850억 유로) 승인된 이후에도 위기가 봉합되지 않고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 중심부로의 확산 우려
 - *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유럽 각국의 채권, 채무관계 및 각각의 취약한 재정상황이 원인
-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경제규모를 모두 합친 것의 두 배가 되는 스페인(유로존 4위 경제국)으로 전이 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
- EU 집행위는 PIGS 국가의 '11년 전망치를 EU 회원국 중 최저 수준 전망
 - * 그리스 : $\Delta 4.2\%$ (10년) $\rightarrow \Delta 3.0\%$ (11년), 스페인: $\Delta 0.2\%$ (10년) $\rightarrow 0.7\%$ (11년), 포르투갈 : 1.3% (10년) $\rightarrow \Delta 1.0\%$ (11년), 이태리: 1.0% (10년) $\rightarrow 1.0\%$ (11년)
- 경제위기 지속과 경기부양에 따른 공공부채 심화로 인해 주요국별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전망
- 이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투자축소 및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對유럽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6

CIS :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및 경제 연착륙

○유가 상승 및 민간소비 회복세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높은 외환보유고(CIS전체 7천억불 규모) 유지 및 산업현대화 정책 등 정부부문의 지출 확대 예상
- 2010년 4~9% 수준의 높은 성장 추정, 2011년에는 성장세가 3~8% 수준으로 연착륙 예상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기대

○최근 3대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로 건설, 인프라구축 특수 기대

- 2013년 하계 U대회(러시아 카잔), 2014년 동계올림픽(러시아 소치), 2018년 월드컵(러시아 모스크바 등 13개 도시)개최로 건설특수 및 국가신뢰도 제고 기대

7 중남미 : 안정적 경제성장, 현지화 강제로 수입수요 증가

○ 내수시장 성장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 남미 경제는 자원개발 및 중산층 확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5.9%(2010)에 이어 4.3%(2011)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평균 성장률 상회 전망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가 남미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 특히 남미의 기관차인 브라질 성장이 아르헨티나 등 인근국 성장 견인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국명	2008	2009	2010(*)	2011(*)
브라질	5.1	- 0.2	7.6	4.5
멕시코	1.5	- 6.5	5	3.9
아르헨티나	6.8	0.9	6.8	4.5
칠레	3.7	- 1.5	4.3	6.0
콜롬비아	2.7	0.8	3.7	3.0
페루	9.8	0.9	6.7	4.5
베네수엘라	4.8	- 3.3	-3.0	2.5

자료원 : CEPAL(*전망)

○ 소비재 판매 급증

- 중산층 확대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내구성 소비재 판매 증가
 - * 브라질의 2010년 자동차 판매량은 340만대로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자동차시장으로 부상 전망
- 중산층 증가는 휴대폰,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등 사치성 제품인 전기전자 제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추세

○ 현지화 강제로 수입수요 증가

- 남미 주요국의 통화 강제로 수입수요 확대. 대부분의 남미 통화는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강세 추세
- 원자재를 제외,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은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더불어 인플레이션 억제효과 노려

8

중동 : 석유 수출국 경기부양, 석유수입국 재정강화

○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성장률 회복

-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상향 안정화와 중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지속으로 실질 GDP 성장률 상승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효과 소멸로 인한 둔화 대비, 중동은 전년대비 1% 포인트 상승한 5.1% 기록 전망
 - * LNG생산시설 확충이 마무리 되는 카타르는 18.6%, 석유가스 증산체제 구축중인 이라크는 1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 EU시장 의존도가 높은 북아프리카국가의 경제성장률은 EU의 경제성장 부진과 현지화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2010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중동지역 경제성장률 상승 주요 요인

- 석유생산량 증가로 석유부문 GDP기여도 향상
 - * 사우디, 카타르, UAE는 석유가스 증산을 위한 대대적 투자
- 국제유가 상향 안정화
 - *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유가 U\$61.68('09), U\$78.82('10), U\$88.70('11)
- 재정확대 정책 실시로 취약한 민간부문 투자 상쇄
- 산업다각화 정책 지속 추진에 따른 비석유부문의 성장

[중동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중동 석유수출국	1.1	3.8	5.0
중동 석유수입국	4.6	5.0	5.2
중동 전체	2.0	4.1	5.1
세계 전체	-0.6	4.8	4.2

자료원 : IMF (*는 전망치)

○ 석유 수출국 경기부양, 석유 수입국 재정 강화 추진

- IMF는 중동지역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2009년 700억불에서 2010년 1,200억불, 2011년 1,500억불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여력이 있는 중동 석유수출국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지속

- * GCC, 알제리, 리비아 등은 경기부양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 우려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
- 석유수입국의 경우 공공부채 수준이 신흥시장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재정 강화(지출축소, 부가세 도입, 정부보조금 축소 및 조세 행정개선)
- * 이집트 정부 지난 2년간 경기부양정책 시행 후 중기재정 강화, 요르단은 VAT면제 철회,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적자규모 축소 전망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부족으로 민간부문 성장 취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와 위험회피 경향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미약
- 두바이 월드사태와 사우디 및 쿠웨이트의 대기업 부도 등으로 채무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 불가
- 국내저축 부진과 외부자금 유입감소도 금융권의 신용공급 기능 부실 초래

9 아프리카 : 도약하는 2011년(Resilience), 위험요인도 상존

○ 2011년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해

- 2010년 성장률은 5%, 2011년은 5.5% 전망(IMF, 2010.10)
- 2000년대 중반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은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실질소득과 민간·공공부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거시경제 변수 부분에서는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중간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를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도 아직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2011년은 선거의 해

- 대선·총선 등 2011년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가 17개
- 선거 결과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음
- 최근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이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고 있음

II. 주요 국가별 2011년 핵심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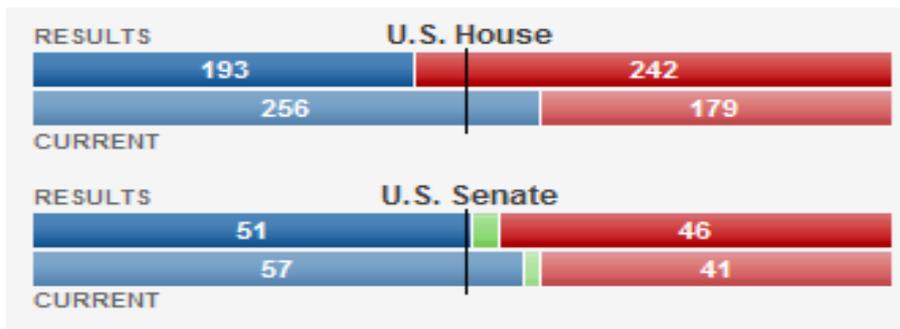
1	북 미
---	-----

가. 미국

□ 자유무역주의 표방 공화당 주축 신규 의회 출범

- 2010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압승, 민주당으로 부터 주도권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석 유지하되, 의석수 차이가 좁혀짐

[2010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주 : 파란색-민주당, 빨간색-공화당 표시, 녹색-무소속
 자료원 : USA Today

- 새 의회가 민주-공화 박빙의 차이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 내 양당 간 팽팽한 대립구도 형성 전망
 - 통상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국회 논의 이슈들 '그리드락(Gridlock; 정체, 마비)'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 오바마 정부의 집권 하반기인 2011년 개혁 동력 약화전망
 - *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2년간 민주당 주도 의회의 탄탄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 건강보험개혁, 금융개혁 등 역사적인 개혁안 시행에 성공
- 미국 새 의회 출범 후 경제 통상 이슈 전망
 - 보호 무역 주의적 법안 발효 가능성 희박. 경기회복세 둔화, 고 실업률 장기화로 의원들이 보호 무역적인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그 수위는 낮아질 전망
 - 기후 변화 법안 추진 이슈 : 시행 가능성 더욱 악화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美 의회 비준 청신호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2010.12)로 그동안 의회비준에 불만을 제기해온 의원들과 자동차 노조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 의회비준에 긍정적 여건 조성

*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

-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일괄적으로 5년째 해 철폐)과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 내 안전 기준과 환경 규제 완화 등 포함
- 그 외,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 2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 대미 파견 근로자 비자 기간 연장 등 한국 측 요구사항 수용

- 2011년 2월 쯤, 미 행정부에서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3~5월 중 의회 비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면 연내 발효도 가능할 전망
- * 양국 의회 비준 동의 후 상대국에 통보, 60일 후 발효

- 한미 FTA 발효 시, 관세 인하 및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자동차(부품포함), 섬유, 전기전자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불)

	대미수출	대미수입	대미 무역수지
자동차	836	72	764
섬유	194	23	171
전기전자	160	126	34
일반기계	34	90	-56
철강	2	2	0
화학	33	108	-75
생활용품	21	22	-1
7개업종	1280	443	837
제조업전체	1387	591	796

자료원 : 산업연구원,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뉴딜컬처, 소비 편식 풍조 정착

- 새로운 미국 소비문화 '뉴딜 컬처' 정착

- 절약형·밸류형 소비패턴 고착화 → '밸류(Value)'와 '딜(Deal)'을 찾는 '뉴딜

컬처(New Deal Culture)가 확산

○ 품목별 극심한 소비 편식

- 기본적으로는 절약 모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구입 지속(스마트폰, iPad 등)

○ 모바일 쇼핑패턴 급부상

- 스마트폰, 태블릿 PC 확산으로 모바일 라이프스타일 일상화 급속히 진행되면서 온라인 쇼핑채널 이용, 소셜 네트워크 접속 더욱 수월해져 쇼핑 패턴 변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매장 내 태블릿 PC 판매]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AP

□ 수입식품 안전 강화하는 ‘식품 안전 현대화법’ 시행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 법안(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S.510))’이 2011년 중 발효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통관절차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

- 안전성이 의심되는 중국산 수입식품이 집중 규제 대상이나, 임의로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도 영향 불가피

* 우리나라 대미 식품(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09년 기준 약 442만 불로 집계

나. 캐나다

□ 40년 만에 개정된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 2010년 12월 14일, 캐나다 의회는 보건부가 2010년 6월 9일 상정한 신규 소비자제품 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하 Bill C-36) 승인

- 2010년 12월 15일 캐나다 총독 재가, 공식적으로 캐나다 법규로 제정
- 신규 '소비자 제품 안전법' 40년 전 제정된 Hazardous Goods Act 대체

○ 신규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리콜 명령제를 비롯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

- 인체 유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 수입, 광고, 판매 금지
- 제품과 관련한 심각한 사건 혹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정부에 관련 사실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정부가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상품 안전 시험결과 제출 의무화
- 유해 상품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강제 리콜 실시 권한 부여
- 위반 시 벌금 강화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발표 중인 캐나다 보건부 Leona Aglukkaq 장관]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 가솔린과 디젤, 신재생 연료 성분 반드시 포함해야

- 2010년 12월 15일과 2011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가솔린과 디젤에 신재생 연료 성분을 2% 이상 포함 의무화
- 신재생 연료 포함 의무화 규제 법안은 기존 석유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줄임으로써, 신재생 연료 수요 확대가 주 목적
- 연간 400 m³ 이하의 연료 생산 혹은 수입 시, 특수 적용 대상 사용 연료 등의 경우 예외 적용

2

중국권

가. 중국

□ 12.5 계획 실시

○ 2011년은 중국 12차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2011~2015), 이른바 12.5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중국의 성장기조가 성장일변도에서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포용성 성장'으로 전환

- 내수 확대를 최대 추진과제로 설정

* 양적 성장'⇒'균형 발전', '外需(수출)'⇒'内需', '国富(국가의 부유)'⇒'民富(국민의 부유)'로 전환

□ 2011년 정책 방향

○ 중국은 2011년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물가 관리를 위해 거시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지속 추진할 전망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2011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一鬆一穩)

-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물가 안정조치를 실시하며 '11년 CPI 상승목표를 4%이내로 설정

□ 위안화 평가절상 자제하며, 기존 수출업계 지원 확대

○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 조치 확대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용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1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
-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수출 지역 다변화, 수출용 제품의 내수 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 실시 전망

○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 둘 전망

- 자원 절감, 신에너지 개발 등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 보완

□ 대내 개방 확대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내개방 조치에 나설 전망

-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만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임

○ 2010년 5월 국무원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려의견'(신36조)을 발표해 민간투자 유치를 장려

- 신36조는 민간투자 분야를 교통운송, 수자원, 전력, 석유천연가스, 전신, 광물자원 개발, 공익사업, 보장형 주택 건설, 의료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금융, 비즈니스 유통 물류, 국방 과학 산업 등으로 확대 및 세분화
- 신36조는 국유독점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과 공공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지만 이들 산업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인 진출을 이끌어 내기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출입 관리와 환경정책의 연계성 증가

○ 2010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입 관리와 환경정책의 연계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 대체적인 내용은 중국 내 환경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설비 및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면세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촉진
-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등

방법을 통해 중국 내 생산을 줄일 전망

□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 연해지역의 지속발전과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주력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지역 경제일체화를 추진
- 청위 경제권, 관중-텐수이 경제권,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경제권,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성) 경제권 등 지역 간 경제통합도 적극 추진
- 2010년 하이난 국제 관광지 건설계획(1.4), 장강삼각주지역 계획(5.24), 샤먼 경제특구 확대계획(6.20)을 발표했고 충칭양강신구계획, 신장자치구 진흥계획, 내몽고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전 방위적으로 추진 중

□ 서비스업 육성

○ 기술도입, 브랜드 수입을 통해 서비스업 수준 제고

- 2015년 서비스업의 비중을 전체 산업의 50%로 제고할 계획
- 금융·물류·의료·관광 시장을 점차 개방해 외국기업 지분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 문화산업 육성

○ 12.5규획 기간 내 문화산업의 GDP에서 비중을 5~6%로 제고

- 2009년 중국의 문화산업 GDP가 전체 GDP의 약 2.5% 차지
-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제작 관련 정부지원책 확대
- 온라인게임, 영화, 드라마 및 캐릭터 제품 수요가 급증할 예상이며 중외 기업 간 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협력 기회가 확대 될 전망

□ 주민소득 확대

○ 국민소득에서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제고

- 201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득분배개혁이 중요 화두가 되었으며 취업확대정책,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임금인상과 지불의 안정적 보장 등 조치를 취해 중저 소득자층의 소득 증가 계획

□ 7대 신흥 전략 산업 육성

- 중국 국무원은 '10년 9월 8일 발표한 '신흥전략산업 양성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 전략 산업으로 선정
 - 세수 및 금융관련 정부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新성장 분야 투자확대 유도
 - 신흥전략산업 전문펀드 조성, 안정적 재정투입 확대 메커니즘 수립 예정
 - 2015년까지 7대 분야의 산업규모 GDP의 8% 규모 육성 전략

나. 대만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발효 및 후속 협상 전개

- '10.6.29일 체결, '10.9.12일 발효한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이 '11.1.1일부터 발효되어 일부 품목의 양안 교역의 무관세화 실시

[1차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적용 규모]

구 분	대만이 양허받은 품목	중국이 양허받은 품목
품목 수(개)	539	267
조기 자유화 품목의 수출금액(USD)	138.3억	28.6억
수출총액 대비 조기 자유화 품목 수출 비중(%)	16.1	19.5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ECFA 후속 협상은 '11년 2월 설 연휴 이후~3월전에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
 - 대만 정부는 후속 협상에서 LCD, 완성차, PVC, PE, ABS 등 플라스틱 원료, 가공센터 공작기계 등 중점 수출 품목의 무관세화도 타진할 계획
- 1차 무관세화 품목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우리제품과 경쟁제품이 적었음
 - 후속 협상에서 LCD 등 우리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무관세화시 시장 경쟁 격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행보 예의주시 필요

□ 대만-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추진

- '10.12.15일 대만과 싱가포르 대표부는 경제동반자협정 정식 협상 추진 공동 성명을 발표
 - 협정의 정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ASTEPA)'
 - 개최시기는 '11년 초경으로 계획, 구체적인 시간과 개최지는 미정
 - * '09년 통계 기준, 싱가포르는 대만의 6대 교역국(6대 수출국이자 9대 수입국)
-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관세는 대부분 무관세화 되어 있으므로, 대만은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주력 예상
 - 싱가포르는 대만에 석유화학/기계/전자제품의 무관세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 인하

구분	인하 전	인하 후	비고
법인세	2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1일부터 소급 적용 ◦ 효과 : 기업환경 개선, 투자 증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수혜 예상으로 균형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 예상

다. 홍콩

□ 홍콩, 중국 선전(深圳)과 금융, 물류 통합 가속화

- 중국정부, 홍콩인접 선전 첸하이에 첨단 금융지구 건설
 - 홍콩과 인접한 선전시 서남쪽 서커우지역 첸하이 매립지에 첨단 금융 지구를 건설 중. 금융 지구 개발 비용으로 2014년까지 약 40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첸하이 서비스 특구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홍콩 센트럴에 버금가는 금융, 물류, 통신, 미디어 중심지구가 돼 2020년에는 총생산 규모 1,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홍콩 20여개 금융, 물류기업 투자의향 밝혀

- 첸하이 지구는 홍콩 첵랍콕 공항과 선전 바오안 공항 둘 다 자동차로 10분 거리 이내. 중국정부가 약속한 영업세 또한 홍콩(16.5%), 중국(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예: 보험회사 영업세 : 5%, 첨단기술 기업 소득세 : 15%)
- 이에 매력을 느껴 '10년 12.20일에 열린 치엔하이 지구 개발 설명회에서 HSBC, 향생은행, 케리무역 등 홍콩의 20개 금융·물류 회사가 투자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남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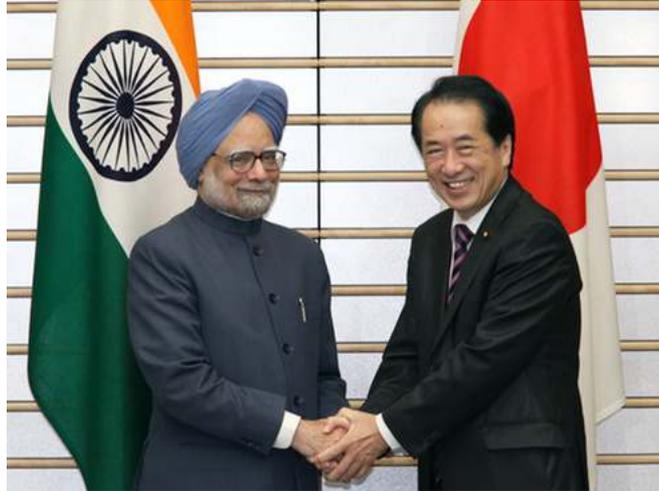
□ 일본정부의 경제연계협정(EPA) 적극 추진

○ 일본-인도 EPA협상 완료 및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TPP) 협의 시작 방침 표명 등 일본정부는 2010년 들어 기존과 달리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 중

-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APEC 수뇌회의에 있어서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실현 등을 메인으로 한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했으며, 2011년 이후에도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전망이다
- 2010년 11월에 발표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다른 주요국과 비해 EPA, FTA 추진 진척도가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인식하면서 주요국 경쟁국과의 비교 및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비교해도 쳐지지 않을 만한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는 EPA(페루 및 호주) 타결이나 현재 중단 상태인 한국-일본 EPA협상 재개를 위한 활동 가속화를 표명
- 한중일 FTA, 동아시아 자유무역권(EAFT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계(CEPEA) 등을 고려하며 연구 단계에 있는 광역 경제연계나 공동연구 실시 중에 있는 몽골과의 EPA협상을 가급적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방침임.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실현을 향한 각료 회합(가칭)"을 개최할 예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의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EU와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정책을 가속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국내 비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한국은 FTA 등 경제연계협정에 있어서 일본보다 앞서가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변모한 일본정부 및 일본경제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수뇌회담에서 EPA체결에 합의한 일본 간 수상과 인도 싱 수상]



□ 법인세 감세 등 세제 개편

-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40.69%에서 5% 인하 방침 발표
 - 법인세 감세에 의한 감소 세액은 1.5조엔 규모가 될 전망
 - 법인실효세율은 주요 유럽국가에서 30% 내외, 아시아 국가에서 20%내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은 높은 세율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제계에서 계속되고 있었음
 - 일본정부는 법인세 감세에 의해 3년 후에는 GDP를 14.4조엔 상승시킬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 “지구온난화 대책세(환경세)” 도입 발표
 - 환경세는 2011년 10월로부터 2015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기원 CO2 배출 억제를 위해 화석연료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석유 석탄세에 CO2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덧붙이는 방식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1킬로리터 당 760엔, 가스 탄화수소에 대해 1톤 당 780엔, 석탄에 대해 1톤 당 670엔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현행 석유석탄세가 1.5배 정도 증세되게 됨

- 철강이나 화학업계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는 환경세 도입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정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서 비판하는 지적도 많음

□ 2011년 주요 행사

- 세계 3대 모터쇼의 하나인 “도쿄 모터쇼”가 2011년 12월2일~11일 기간 중에 도쿄도내에 소재하는 도쿄 국제전시장(도쿄 빅사이트)에 개최될 예정
 - 2011년 모터쇼는 42회에 해당하는 전시회로서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함
 - 전시회에서는 “SMART MOBILITY CITY 2011”라는 테마로 차세대 자동차와 친환경 시스템에 관한 기획 전시가 실시
 -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친환경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와의 새로운 모습이 전시됨

[2010년 도쿄 모터쇼 현장]



- 뛰어난 환경성능을 보유하는 일본 완성차 메이커의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부품 메이커들도 출전하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시회이며, 특히 2011년에는 향후의 친환경 자동차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 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예의 주시해야할 필요

4

아시아

가.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싱가포르 기업에 과세연도 2011년부터
세금공제 혜택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싱가포르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2011년부터 도입 예정
- 과세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생산성 및 혁신 공제(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제도는 생산성 및 혁신과 관련된 6개 활동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한 자금, 즉,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R&D 비용, 지적재산 등록비용, 지적재산 인수 비용,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 자동화 프로세스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직원 역량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과세 소득 산정 시 공제해 주는 제도
- 생산성 및 혁신 공제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혜택 대상은 싱가포르 중앙 공제 기금(CPF)를 납부하는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직원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기업 및 사업체임

□ (베트남) 국영 조선 비나신(VINASHIN)의 구조 조정 성공여부가
최대 경제변수

- 베트남 최대 국영 조선기업 VINASHIN



1972 Vietnam Shipbuilding Union 조직
1996 총리령으로 20개 조선 기업을 통합해
Vinashin 설립

○ VINASHIN 구조조정 난항

- 2010년 6월 VINASHIN 부채규모가 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 밝혀짐
- 문어발식 방만 경영 과정에서 현 베트남 총리도 일정부분 관여가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실경영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일련의 사태를 거침
- 12월 20일 만기가 도래한 6000만 달러에 대해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선언

○ 베트남 국가부도 위기 논의까지 거론

- VINASHIN 채무불이행시 VINASHIN 채권을 보유한 베트남 은행권 전체에 까지 파급효과
- 베트남 GDP의 4.5%를 차지하는 44억 달러 규모의 채무규모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 베트남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할 경우 VINASHIN 외 타 부실 공기업들도 지급보증 요구를 할 수 있어 베트남 정부 역시 사면초가의 입장
- 이에 따라 12월 15일 무디스 사는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a3에서 B1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
- VINASHIN 구조조정 난항은 불안한 베트남 외환시장과 더불어 2011년 베트남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
- 타 동남아 국가와 달리 베트남 동화의 대 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추세 (평가절하)에 있으며, VINASHIN 사태로 인해 금·달러 사재기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2011년부터 연료보조금 단계적 철폐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2013년 동안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결정

- 2013년까지 총 20조 7,600억 루피아 보조금 예산 절감을 위해 2011년 3월에 보조금 철폐를 시작하기로 결정

○ 보조금 대상 차량은 민간/정부/군 소유 차량임

- 대중교통, 오토바이 그리고 어선의 연료보조금은 현행 체제 유지
- 즉, 보조금 철폐 대상 차량은 6,100~6,800루피아/리터에 연료를 구입해야 함 (연료보조금 연료 가격은 4,500루피아임)

유형	연료보조금 Quota (백만 킬로 리터)		
	2008	2009	2010
Premium	19.4	19.4	23.1
Kerosene	7.8	5.8	2.4
Diesel	11.8	11.6	12.8
총계	39.0	36.8	38.3

○ 2011~2013년 동안 보조금 철폐

- 1단계: 자카르타(보고르, 땅그랑, 버카시, 데폭) 지역에 2011년 3월부터 적용
- 2단계: 2011년 말까지 자바, 마두라 그리고 발리 지역에 실시
- 3단계: 2012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실시
- 4단계: 2013년에 슬라웨시 지역에 실시

○ 현행 연료보조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자바, 발리, 마두라 지역임

- 그 다음으로 수마트라, 칼리만탄,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임

지역	연료보조금 적용률
Jakarta 외 주변 지역	18%
Java, Madura, Bali	41%
Sumatera	22%
Eastern Indonesia	10%
Kalimantan	7%
West/East Nusa Tenggara	2%
총계	100%

○ 비보조금 연료(Pertamax) 보유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1년 3월 시행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

- 나머지 90%의 주유소는 보조금 연료(Premium)만을 주유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주유소에 비보조금 연료 주입기를 설치하는데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전망

○ 자가용을 보유한 많은 수의 중산층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전망이나, 현재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대중교통 수가 많지 않음

- 따라서 일반 버스 차량, CNG 차량이 많이 판매될 전망

- 비보조금 연료 Pertamina 보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공급망을 확대할 전망
- 동 보조금 철폐로 0.9%p의 물가상승 압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보조금 연료의 암시장이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 (필리핀) 2011년 공휴일 15일로 6일 줄어

- 2010년 7월 취임한 노이노이 아퀴노(Noyonoy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그 동안 필리핀의 휴일이 너무 많아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저해되었다며 2011년 휴일을 대폭 축소한 대통령령(Proclamation No. 84)을 발표하였음
- 2011년 휴일은 15일로 2010년의 21일보다 대폭 감소했음에도 아직도 베트남의 9일, 싱가포르의 11일, 대만의 12일보다 많은 상황임
- 기업들은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휴일과 연속 공휴일로 인해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음
- 기업들은 그 동안의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사라지게 되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의 잠재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기대
- 공휴일 축소 기대효과
 - 필리핀 내국 및 외국 투자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 기업의 연간 생산목표 설정 및 충족 가능한 충분한 노동시간 확보
 - 휴일 수당 지급 불요로 인한 수천만 불의 인건비 절감
 -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기회 확대 및 수입증가

□ (태국) 2011년 총선 실시

- 태국은 헌법에 의하여 2011년 3~4월 기간 중 의회를 해산하고 2011년

중순경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 2011년 예정된 태국의 총선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첫째, 금년 상반기 발생한 反정부시위사태는 현 민주당정권이 총선을 통하지 않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며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 둘째, 헌법에 의하여 4년 마다 실시하게 되는 총선은 향후 현 정권인 민주당 계열과 탁신 계열의 투쟁으로 양분되는데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정당의 수장이 총리가 됨.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셋째,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음

○ 내년 총선은 탁신계열의 Puea Thai Party 나 Abhisit 총리계열의 민주당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수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보임

○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양분된 세력이 총선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한동안 잠잠해졌던 태국의 정국이 다시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만약 태국이 내년 총선을 무사히 치르고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마칠 경우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태국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시행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小水力), 태양전지, 고품 폐기물에 FiT 적용
 -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국산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고정된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말레이시아는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기존(2009년 기준) 1%에서 2015년까지 5.5%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말레이시아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RE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2010년 1월에서 9월까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생산된 전력원을 보면, 54.3%가 가스, 39.8%가 석탄, 5.5%가 수력발전, 그리고 석유, 디젤, 바이오매스 등임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은 2006년 55MW에서 23배가 증가하여 2015년 1GW, 2030년 4GW까지 성장할 전망
 - 2020년까지, RE 발전역량은 2080MW에 달하여 전체 에너지 수요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 2010년 4월 2일, 말레이시아 내각은 “신재생 에너지 법률” 및 “FiT 시행 기관에 관한 법률”을 승인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산하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국(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SEDA)’을 설립하여 FiT 프로그램을 관리할 계획임
- SEDA는 FiT 제도와 함께 호혜적이면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금융 기관들의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장려하고, 또한 발전 설비에 대해 고정 수익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발전 설비 소유주들은 양질의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업자 및 시공업자들 역시 품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전략적 교역법 (Strategic Trade Act 2010) 시행 예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테러 활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품(strategic items)의 수출 규제를 요청한 2004년 UN결의(UN Resolution)와 같은 맥락에서 테러 활동으로부터의 무역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구해왔음
- 그 결과 제정된 전략적교역법(STA)이 무역산업부(MITI) 관리 하에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예정임

- STA는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 환적, 이전 및 중개를 관리하면서 대량 학살 무기의 설계,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한 모든 잠재적 활동과 운반 체계를 규제함
- STA의 최종 목적은 안정적인 무역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책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음

나. 서남아시아

□ (인도) 인도-일본 CEPA 2011년 서명 및 발효

- 인도, 일본 양국은 2011년 1월 중 포괄적 FTA인 CEPA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 측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와 대인도 수출시장에서 경합수준이 높은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인도의 對일본 수입시장 개방 비율은 91%로 대한민국 개방 비율 85%보다 개방 폭이 크며,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철강 등 주요 품목은 이미 현지 시장 내 경합이 치열
- 인도-EU FTA도 2011년 타결 가능성 높아
 - 2006년 시작된 인도-EU FTA가 빠르면 2011년 봄에 타결될 예정
 - 인도-EU FTA는 상호 제품 관세를 90%까지 줄이고 교역과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현재 양측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700억 유로(910억 달러)에 달함

□ (파키스탄)일반판매세(GST) 개혁으로 혼란 우려

- 파키스탄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일반판매세 관련 제도가

2011년부터 변경됨

- 16%~25%까지 들쭉날쭉하던 세율을 15%로 단일화하고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되는데 업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 갈등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 오세아니아

□ (호주) 한-호 수교 50주년을 맞아 FTA 체결 기대 상승

○ 현재 한국과 호주 양측이 5차 협상을 마치고 양허수준 및 기간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상황,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한-호 FTA 체결 기대됨

- FTA 체결 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분야 등의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 기업 수출 확대 기대
- 반면, 농축산업, 식음료(와인) 등의 장벽 완화로 호주의 한국 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특히 금융 분야 등의 호주 진출 전망도 밝음

○ 기타 FTA와 관세율 변화 동향

- 미국산 신발 4% -> 3%, 칠레 포도류 3.5% -> 3% 관세 감면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체결으로 인한 무관세 혜택이 1월1일 라오스, 1월 4일 캄보디아 시행
- 일부 화학약품과 농약에 대한 품목코드 변경: 2903.59.00, 2908.19.00, 2908.99.00, 2910.90.00, 2930.90.00, 2934.99.00, 3808.91.90, 3808.92.00, 3808.93.00, 3808.99.00

□ (호주) 소매업의 경쟁력을 위해 \$1,000 미만의 구매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호주 달러 강세로 인한 해외 온라인 쇼핑 증가와 이로 인한 호주 소매업체들의 매출감소로 내부시장 위기

- 다른 국가와는 달리 호주는 현재 \$1,000 미만의 해외 구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많게는 30%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소매업체들의 큰 매출 감소가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 광역시 출범으로 인프라 개발 수요 급증

○ 뉴질랜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시가 주변의 4개 도시와 3개의 지역구를 흡수·통합해 2010년 11월 1일부터 광역시로 출범함

- 광역시의 출범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3개 프로젝트, 하버브릿지 해저 터널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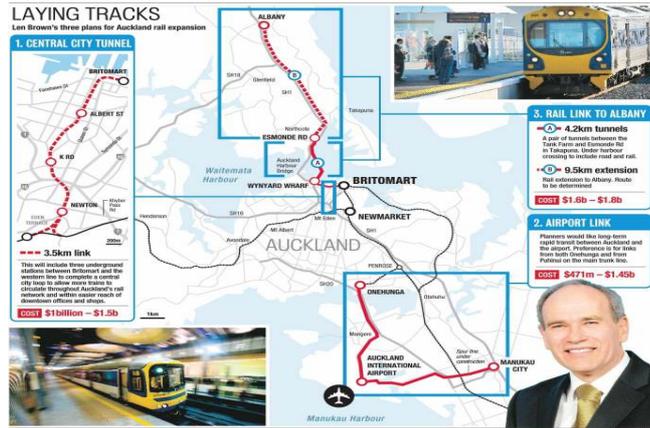
[오클랜드 광역시 철도노선 개발계획]

프로젝트	개요	소요예산	정치적 지지현황
도심순회 철도노선	시내 Britomart역과 기존의 서부노선을 연결하는 3.5km 터널라인 및 역사 신설	NZ\$10~15억 (약 7억4000만~11억1000만 달러/ 환율 NZD1=USD0.74)	20명의 신임 시의원 중 12명이 적극 지지
공항노선	클랜드국제공항과 기존 남부선의 Onehunga 및 Puhinui역사를 새로 연결	공항- Onehunga 역사 연결노선 : NZ\$ 11억2000만	20명의 신임 시의원 중 10명이 적극 지지
		공항- Puhinui 역사 연결노선 : NZ\$ 4억8000만	
하버브릿지 횡단 강북노선	시내 Britomart역에서 하버브릿지를 횡단해 북부 Albany지역까지 총 13.7km의 알바니노선 신설	해저터널(4.2km) 및 현 버스전용차선에 철로신설 : NZ\$ 16~18억 / 전 구간을 터널로 건설할 경우 약 3배 소요예상	20명의 신임 시의원 중 8명이 적극 지지

자료원 : 뉴질랜드 일간지 NZ Herald 및 뉴질랜드 중앙은행

- 상기 개발 계획 중 오클랜드 침매터널 건설이 우리기업에 기회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오클랜드 광역시 출범이후 중앙정부는 상기 프로젝트들이 우선과제임에는 동의하나 재정지원에는 난색표명

[오클랜드 광역시의 철도노선 확장계획]



자료원: www.nzherald.co.nz

5 유럽

가. EU

□ 한-EU FTA 발효로 우리기업 경쟁여건 개선

- 한-EU FTA는 오랜 협상 끝에 '09년 10월 15일 가서명 및 '10년 9월 16일 EU 승인에 이어 '11년 7월 1일 공식 발효 예정
- '10년 9.16 개최된 EU 특별이사회에서 한-EU FTA에 거부 움직임을 보이던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최종 EU 승인
- 전체 품목의 97.3% 즉시 철폐 및 99% 3년내 조기철폐(품목수 기준)

[양국간 양허안 현황]

구분		즉시철폐	3년	3년내철폐	5년	7년	총계
한국	수입액	69.4	22.4	91.8	6.9	1.3	100.0
	품목수	90.7	5.1	95.8	3.7	0.5	100.0
EU	수입액	76.7	16.6	93.3	6.7	-	100.0
	품목수	97.3	2.1	99.4	0.6	-	100.0

작성기준 : 공산품 및 임산물(우리측 9,404개, EU측 7,398개 품목 대상)

[한-EU 조기 철폐 주요품목]

(단위 : %)

산업 구분	조기철폐비율		조기철폐 주요품목	
	한국	EU	한국	EU(현 관세율)
자동차 및 부품	96.0	72.2	양국 공히 중, 대형차 3년, 자동차 부품 전 품목 즉시철폐	
전기전자	97.0	97.8	반도체생산부품, 발전기, 축전지, 가전제품, 무선기기	TV(14), TV부품(5), 비디오(14),라디오(12), 배터리(4.7)
섬유	92.8	99.9	면사, 아크릴사, 일부 양모사, 가죽제품, 의류	일부모직물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7~12)
기계	83.3	98.9	공구, 펌프, 공조기, 인쇄기, 연삭기, 밸브, 베어링, 계측기	베어링(8), 광학기기(6.7), 엔진부품(4.2), 밸브(2.2), 펌프(1.7)
화학	88.5	100	석유화학,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정밀화학 일부	일부 타이어, 세라믹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4~12)
철강비철 금속	96.4	100	주철, 스텐레스강, 동, 니켈, 아연, 알루미늄 제품	일부 동제품, 주방용품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4~10)
생활용품	95.8	100	필름, 신발, 타이어, 운동기구, 악기, 귀금속, 완구	일부 가방, 신발, 타이어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3~17)
기타	93.9	100	항공기부품, 철도부품, 자전거, 선박/부품, 광물류	선박기자재, 윤활유 등 전 품목 즉시철폐(1~6)

자료원 : 외교통상부

□ EU,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

○ EU는 '07년 이래 BRICs 국가 중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11년 EU와 FTA 타결 전망

□ **新EU 에너지 라벨 도입**

- '11년 2월 발효 예정, 발효 즉시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에너지 라벨 부착 가능, 발효 후 1년 내 의무 시행
- 적용대상 품목 : 기존의 7개 품목(①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냉동고, ② 세탁기, 건조기 및 세탁건조기, ③식기세척기, ④오븐, ⑤물 가열기 및 온수 저장기기, ⑥조명기기, ⑦에어컨디셔닝 기기)에 TV제품 추가

[新EU 에너지 라벨]



□ **2011년 9월부터 EU내에서 60W 이상의 백열구 판매 금지**

- EU는 2009년부터 백열전구의 공급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010년 9월부터는 75W 이상 백열전구의 시판을 금지했고 2011년 9월부터는 모든 백열전구 완전 퇴출 예정

□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 지침(RoHS) 적용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 예상**

- 유럽의회가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유독성물질 함유금지 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적용대상을 현행 특정 품목군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채택

- RoHS 개정지침은 품목에 따라 다르고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화 시기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빠르면 201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나. 영국

□ 부가세 인상 및 공공부문 감축으로 서민생활 이중고 예상

- 영국 정부부채 감축 방안으로 2011년부터 VAT 인상 (17.5% -> 20%)
 - 휘발유, 자동차 등의 부가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간 425 파운드의 추가 세금 부담
 - 부가세 인상으로 영국정부는 113억 파운드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나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예상됨
 - * 영국 소매 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은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3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발표
 - 영국 정부는 농수산물 등 생필품은 면세대상으로 남기고, 소매업체가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매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가격 조정 대비를 할 것으로 극적인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 예상. 부가세 발표 이후 2011년 경제성장률은 2.6%->2.3%로 조정 발표
- 2015년까지 정부예산 25%(810억 파운드) 삭감으로 약 5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 현재 영국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11% 선으로 EU 기준인 4%를 훨씬 초과. 영국정부는 정부지출 축소방안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50만명 감원 및 2년간 임금동결 예정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공단, 협회, 재단 등 정부가 제한된 행정권을 가지는 901개 준정부기관 통폐합을 통해 30% 이상의 축소를 계획
 - 인력개발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는 간접 영향으로 민간영역에서도 향후 5년간 160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경고

□ 2011년 주요 행사

- 2012년 런던 1908년, 1948년에 이어 역사상 3번째 올림픽 개최

- 로이드은행은 런던올림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국 내 매출증가가 1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올림픽에 관련된 Newham, Hackney, Waltham Forest, Tower 등 동부 런던지역은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인프라 확충이 한창임
- 영국 총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IT메카(East London Tech City)를 런던에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
- 또한 런던시는 2012년까지 런던 시내의 보안과 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모든 지하철역에서 Wi-fi 서비스 가능케 할 예정

다. 프랑스

신차 구매 지원제도 폐지

○ 10년 이상의 중고차 폐차 후 저탄소차 구매 시 지원제도 폐지

- 지난 2009년 말부터 시행해오던 신차 구매지원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중고차 판매 증가 및 신차 판매 감소 전망

파리, 2011년 “무인대여 전기차(Autolib)” 최초 운행계획

○ 파리는 전기차 무인대여서비스(Autolib)를 2011년 10월부터 단독으로 시행하고 2012년초 인근 40개시에 확대할 계획 아래 4인승 소형 전기차(Bluecar)를 개발한 프랑스 볼로레(Bolloré) 그룹을 동 운영 업체로 선정

- 파리 시는 40개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2012년 초까지 충전시설을 구비한 주차장 1000개(파리 700개)를 설치하고 3000대의 전기차 “Bluecar” (최대주행거리 250km, 시속 150km, 재충전 소요시간 4시간, GPS 장착)를 제조하는 볼로레를 “Autolib” 운영업체로 선정

라. 스페인

스페인 정부,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 위해 고강도 개혁안 마련

○스페인 정부는 아일랜드 구제 금융으로 인한 유로존 위기 확산에 대응해 지난 2010년 12월 1일 고강도 개혁안 추가 발표

- 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긴축정책에 이은 두번째 개혁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및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 중소기업 성장촉진책으로 요약됨
-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공항공사(AENA)와 국영 복권기업(Loterias) 지분의 각각 49%, 30%를 매각할 계획. 나아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주요 13개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 추진
-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로는 장기(보통 2년 이상) 실업자에게 지원되던 월 426유로의 보조금 철폐

마. 이탈리아

□ ‘Made in Italy’ 기술 자산 획득을 위한 중국의 투자 유입 러시

○중국은 관광산업과 연계, 엄청난 부가가치를 양산해내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요트선박 제조기술을 자랑하는 伊 조선소 인수에 공격적 투자를 진행

- 이미 현지 요트 제조사인 달라피에타(Dalla Pieta'), 라바냐(Lavagna), 리자르디(Rizzardi)社가 세계 금융 위기로 촉발된 자금난으로 중국기업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기업이 판매하게 될 Dalla Pieta'사와 Lavagna사의 고급 요트]



□ 온라인 유통시장 활기

- 2010년 이탈리아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의 매출규모는 약 65억 유로 기록 전년대비 10% 상승
- 전자상거래가 주는 가격 및 시간적 효용성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급속히 파고들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6%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인기로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현지 온라인 유통기업의 17%가 아이폰이나 블랙베리와 같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18%가 핸드폰에서 직접 검색 쇼핑이 가능하도록 사이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경쟁 심화

[이탈리아 온라인 유통 시장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Assinform (참고 : 2010년은 추정치)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의 견인차가 될 스마트폰 홍보전 경쟁]

Smartpack Gold
Parli, navighi e vai al cinema gratis per tutto il 2011. Paga 3.

Samsung Pocket 3G Evo a 99€ **49€**



Scegli il tuo BlackBerry
Canone mensile a partire da 0 euro!

BlackBerry Internet Service Assistenza Tecnica Evoluta



BlackBerry Curve 8520 BlackBerry Curve 9300 EG BlackBerry 9700 Bold

바. 네덜란드

□ 신정부 긴축재정 정책 본격화 전망

○ 2010년 10월 출범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보조금 축소 등으로 요약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및 목표]

분야	정책방향 및 목표
공공재정	- 180억유로 공공예산 절감 - ODA 축소 : GDP 0.8% → 0.7% - EU 재정분담액 10억유로 삭감
사회보장	- 아동 및 의료보조금 축소 - 최저임금 인하, 기본 복지혜택 축소 - 연금수령 연령 65세 → 66세로 상향
기타	- 공영방송 예산 2억유로 삭감 - 대학생 보조금 4년 → 3년으로 축소 - 문화예술 예산 축소

□ 법인세율 인하 : 25.5% → 25%

○ 최대 법인세율 25.5%에서 25%로 인하. 이익규모 20만유로 이하는 중소기업 세율인 20%로 인하

[법인세율 개편(안)]

이익규모(유로)	2010년	2011년
~ 40,000	20%	20%
40,001 ~ 200,000	20% *한시적 운영	
200,001 ~	25.5%	25%

사. 스위스

□ 부가가치세율 인상 (7.6% → 8%)

○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일반물품/용역 : 7.6% ⇒8.0% (+0.4% 인상)
- 생활소비재: 2.4% ⇒2.5% (+0.1% 인상)
- 숙박서비스: 3.6% ⇒3.8% (+0.2%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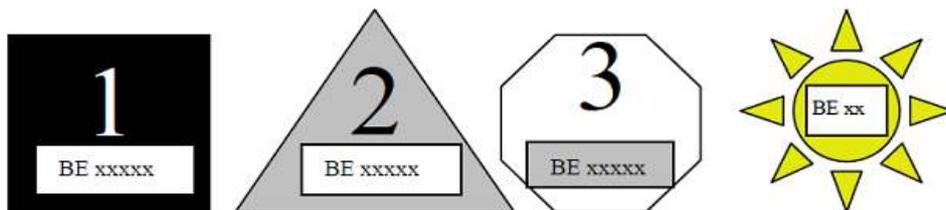
□ 환경존 제도 도입

○ 스위스 정부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존(Umweltzone)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11년 4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

- 환경존 법안초안의 핵심은 환경스티커(Umweltvignette)의 도입으로, 차량 종류별로 배기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색깔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환경존(Umweltzone)에는 오염이 심한 차량은 진입을 금지

○ 환경스티커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솔린 엔진) 경우, EURO 1은 진입금지, EURO 2는 조건부나 시간을 제한하여 진입할 수 있고, EURO 3 이상의 차량이어야 환경존에 들어갈 수 있음

[배출가스 오염도별 환경 스티커]



자료원 : 스위스 도로교통국(ASTRA)

아. 오스트리아

□ 논란 많았던 은행세 2011년부터 도입 결정

○ 사회당(SPÖ)과 국민당(ÖVP)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집권 연립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 시켜 왔던 은행세(Bank Tax)가 마침내 2011년부터 도입 시행되기로 확정

-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同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 소재 은행들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10억 유로 이상, 200억 유로 미만일 경우 총자산 금액의 0.055%, 200억 유로 이상일 경우 총자산 금액의 0.085%의 은행세를 납부하여야 함

○ 신설된 은행세로 인해 총 5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바, 오스트리아 재정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자. 핀란드

□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실시

○ 현재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고 대통령 승인 대기중

- 2월에 있을 EU집행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은 후 실시 예정이며 본 승인을 거친 후 지원 금액이 확정될 예정
- 본 제도의 효과는 특히 풍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로 부품 시장 뿐 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도 커질 전망

차. 그리스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신개념 투자 유치법(일명 **Fast Track**) 제정

○ 3년內 300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범 내각기구에서 전담

- 2009년 10월 사회당 정부의 집권 이후, 그리스 투자를 계획했던 7개의 대형 투자자들이 그리스의 관료주의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으로 그리스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고 경쟁국인 터키로 투자 대상국을 변경한 사태가 발생
- 이에 따라 수상이 직접 대규모 투자 사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비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동 법률(Fast Track)을 제정

○ 동 법률 제정으로 그리스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 전수,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증가, 지역경제 발전, 수출 증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의 효과 기대

- 'Fast Track'은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투자 부문 전체를 아우르며, 2011년 1월 2일 부로 발효될 예정

카. 터키

□ 2011년 한-터 FTA 체결 임박

○ 한-EU FTA 타결과 관련하여, EU와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도 2010년 4월 한국과 FTA 협상 개시

- 한-EU FTA가 발효되는 2011년 7월 이전 발효를 목표로 특별한 쟁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양허스케줄은 한-EU FTA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

타. 폴란드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율 1% 포인트 인상

○ 현행 부가세 기본세율(22%)은 내년 1월부터 1%포인트 상승한 23%를 적용 예정. 의약품, 식료품에 대한 세율은 그동안 3~7%의 선별적 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5% 단일세율 적용

- 금번 부가세 인상은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정부 재정 적자규모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를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

□ 유로 2012 개척 준비로 교통인프라 투자 가속

○ 철도 시설 관리공단(PKP PLK)는 2011년 25억 유로 규모의 시속 200Km급 고속 철도 공사(Warszawa-Tłuszcz, Poznań-Wrocław 또는 Warszawa-Radom) 입찰 예정임을 발표

- 2011년에 계획 중인 해당 입찰은 2007-2013년간 시행될 관련 가장 큰 철도 투자 중 하나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

파. 헝가리

□ 개인소득세 인하, 지방 사업세는 인상

○ 헝가리 정부는 개인소득세 부과시 5백만 포린트를 기준으로 이중 세율을 적용했으나 2011년도부터는 단일 세율인 16%를 적용키로 함

- 법인세율은 현행 500백만 포린트를 기준으로 동금액 이하는 10%, 이상은 19%를 각각 적용했으나, 유예기간을 둔 뒤 2013년부터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 건물과 관련한 지방세는 당초 s/m당 900포린트에서 1,100포린트로 대폭 인상

하. 루마니아

□ 세금 인하 추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세금인하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소득세	16%	10-12%	◦예상시기 : 2011년 3월 이후
법인세	16%	10-12%	◦사유 : 세금인하로 소비 진작 통한 경제침체 극복 ◦과급효과 - 세금인하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재 판매 증가로 한국산 가전제품 수출증가 전망 - 법인세 감면에 따른 여유자금의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요 증가 전망

6

CIS

가. 러시아

□ 러시아, WTO 가입 예상

○ 러시아와 미국 EU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저해하는 지적재산권 등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 미국과 EU의 지지를 얻은 러시아는 가입협상 마무리 단계에 도달
- 향후 러시아가 WTO에 가입 시,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WTO가입을 위한 움직임 등 러시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 2011년, 러시아 평균 관세 10.05%로 하향 조정

- 2009년의 10.61%와 2010년의 10.15%에 비해 하향 조정
 - 경제 성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경제 정책
-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최신 기기와 설비에 대한 낮은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의 진보된 기술

□ '보험부담(구 사회보장세, 일명 고용주세)이 총 26%에서 34%로 증가

- 2011년 1월부터 기존의 사회보장세가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으로 대체
 - 고용주(employers)에게 부과되는 보험부담은 연방예산,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등 3개 재원용도가 통합되어 징수
 - 2011년 과세대상 급여 상한은 463,000루블(2010년은 415,000루블)이며, 모든 기금에 단일 과표가 적용됨
 - 2011년부터 부담률은 34%(2010년 26%)로 변경될 것임
 - 새로운 보험체계의 주요 조항(납세자, 과표, 부과체계, 보고기한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이전 사회 보장세와 동일함
 - 고용계약과 기타 민법상 계약에 의거 러시아에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및 기타 보상에 대하여는 보험 부담 대상에서 배제됨

[보험 부담에 대한 일반 세율]

과세연도	연방 재정	사회보장 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1월부터	26.0%	2.9%	3.1%	2.0%	34.0%
2012년1월부터	26.0%	2.9%	5.1%	0.0%	34.0%

□ 러시아 내 특별경제구역 더 늘어날 듯

- 지난 11월 말 러시아 정부는 Sverdlovsk 주 Verkhnyaya시에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한다고 발표

- 국영기업 Russian Technologies의 하청업체인 세계적인 티타늄 생산 업체 VSMPO-Avisma가 지원
- 러시아 재정부, 상공부, 관세청 등이 고려를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실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상되는 예산은 지역예산 및 개인투자액을 포함 100억루블(약 3억 3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됨
- Russian Technologies는 동 특별경제구역이 조선, 에너지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핵에너지 엔지니어링, 의약품 생산업체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나 굿리치와 같은 잠재적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나. 우즈베키스탄

□ 민간 중소기업 통합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확대 추진

-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게 부과되던 통합세는 기존의 8%에서 2011년 6%로 인하
- 2011년을 민간 중소기업 육성의 해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이 전망됨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보장, 사업장의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신규 사업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사업자 대상의 자금 대출 등이 방안으로 꼽힘
- 2010년은 우즈벡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및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지원을 통해 다각화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음

다.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개정 세법안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세율 인하로 기업 활동의 부담은 줄어드나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재정 적자에 부담 전망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2014년까지 매년 2%p씩 인하
* 연도별 법인세율: 2011년 23%,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6%

○ 유류세 및 가스세 인상으로 경제 부담 가중, 에너지 절약 상품 인기 전망

- 유류세 : 2011년부터 40% 인상
- 가스세 : 2011년부터 18.5% 인상

○ 대체에너지 분야 법인세율 면제 혜택

-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기업세(corporate tax)가 면제
- 대체에너지 분야 산업 활성화 전망

□ EURO 2012 개최로 신규 투자 증가 예상

○ 도로, 철도, 경기장 등 대회 개최위한 기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본격화 전망

- 2011년에 약 77억불의 자금이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투자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계속되는 IMF 구제금융 체제와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주요 프로젝트 추진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전망

7

중남미

가. 브라질

□ 2011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 4.5%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에 의하면 2011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중산층 확대 및 민간소비 증가세 지속,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5% 성장 전망

- 2011년 브라질의 수출은 헤알화 강세 및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2,050억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970억불 전망
-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는 브라질 경기회복 및 대형국책사업 지속에 힘입어 전년대비 18.4% 증가한 450억불 달할 예정

□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정부 출범

- 2011년 1월 1일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새 정부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남미지역에서는 칠레 및 아르헨티나 이은 세 번째 여성 대통령 탄생 의미
- 새 정부는 룰라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근 인플레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배제 못하는 상황

□ 대형 국책사업 본격 추진 전망

-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1년부터 고속철도사업, 공항, 항만, 철도, 호텔, 경기장 등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예정
- 리우-상파울루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와 더불어 100만호 서민 주택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조선업 호황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 중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고속철도, 지하철, 시외철도, 화물철도 등의 건설 본격화로 철도 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협정(GSTP) 상파울루 라운드 타결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상파울루라운드 타결로 한국의 對 브라질 수출여건 개선 기대
 - 한국과 메르코수르국가를 포함한 11개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이 지난 12월 16일 서명되고 2011년말 발효를 앞두고 있어 한국의 對 브라질 수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총 수입품목수의 70%에 달하는 6,367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20% 인하시킬 계획
- 주요 수혜품목은 브라질의 현지 생산이 약하거나 수입수요가 높은 전기 전자부품,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선박, 철도 차량, 유기 화학품, 의료용품

나. 멕시코

□ '11년 관세인하 시행

- '08년 경제부(SE)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11년 478개 항목에 대한 일반 관세인하 실시
- 이번 관세인하는 품목별로 약 5~10%의 관세가 인하되며, 주로 적용되는 품목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 자동차, 가죽제품 등
- 對 한국 수입액 상위 200개 품목 중 관세인하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의 경우 종전 30%의 관세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멕시코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

다. 칠레

□ 국제구리가격 상승 및 구리생산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급증

- 2010년 평균 구리가격은 44년 만에 최고치인 3.4불로 1966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러한 상승세는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칠레 구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평균 구리가격은 3.9불이 될 것으로 예상
- 칠레 최대 산업인 광업의 호황에 따라 2011년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 발주 잇따를 전망

- 실제로 칠레 카톨릭 대학 전력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칠레 전체 전력 프로젝트 규모는 3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TV시장, 디지털방송 확대 법안에 힘입어 확대될 전망

- 4년 이상 지연된 국가 디지털 방송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 이번 2011년 3월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사업 확대 기대
- 칠레 통신청에 의하면 현재 20만 가구 이상이 디지털 TV 및 셋톱박스를 구입 하였으며 향후 크리스마스 특수로 인해 연말까지 보급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 방송의 디지털화가 본격화 될 경우, 보급률 증가세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 방송 보편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라. 아르헨티나

□ 수입 규제 강화 전망

-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라 2011년에는 전반적인 비관세 진입 장벽 강화 예상
 - 특히, 자동차 수입급증에 따른 상업부 차관 및 생산공업부 장관의 프리미엄급 고급자동차 20% 정도 수입 규제 시사 발언(12월10일)
 - 한국산 등 5개국의 인쇄용 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12월10일)

□ 원전도입 등 대규모 입찰 시행 예정

- 아르헨티나 원전 4호기인 Auucha III기의 노형 결정 및 도입을 위한 국제입찰 2011년 상반기 예정(우리나라도 참가 예정)
 - 기타 화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입찰 다수 시행 전망

□ 신규 제도 및 정책에 따른 차기 떠오르는 시장

○ LED 전구

- 연방 국회가 제정한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에 따라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선 백열등 판매가 전면 금지
-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기회사를 통해 백열등을 절전형 LED 전구로 바꿔주는 교환 플랜을 시행중으로 현재까지 1,600만개가 이 플랜을 통해 무상 배분

○ 광케이블

- 연방 IT 개발계획 일환으로 전국에 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추진되면서 2011년도에 3만Km 광케이블 설치 예정

○ CCTV, DVR 등 보안기기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치안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 3월까지 보안카메라 1,000대, 4월까지 추가 1,000대 설치 예정이며, 지방 주정부에서도 CCTV 설치 계획 발표예정

마.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부가세 인상 예정

- 금년 12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특별기금 설치 및 세금으로 인한 재원마련을 이유로 정부 베네수엘라 정부는 부가세를 현행 12%에서 14%로 인상 결정
-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2%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약화가 예상

바. 파나마

□ 2011년 7월 중 한-파 FTA협상 개시 예정

-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통상 협상 차관 프란시스코 알바레스는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장과 함께 한-파FTA 타당성 조사 실시 협의
- '11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조사 및 의견 조율을 마치고, 7월경 본격적인 FTA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 '10년 10월 20일 추진된 한-파 정상회담 중 양국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정도 체결된 바 있어, 양국 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

8

중동

가. UAE

□ 신용 공급(Credit Availability) 부채 재조정(Debt Restructuring), 부동산 (Property Market) 3가지 항목이 최대이슈

- 민간부문 신용공급(credit availability) 미약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유동성 부족과 2009년 11월 두바이월드 사태 이후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경향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내저축 부진과 외부자금 유입감소도 금융권의 신용공급 기능을 부실하게 하고 있어 민간부문 성장에 걸림돌
 - 최근 발간된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09년도 UAE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40억불로 전년대비 71% 대폭 감소
- 두바이,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 1,000억불 이상

- 2010년 10월 두바이월드(DW)사, 11월 두바이홀딩사 등이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규모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했으나, 두바이 정부관련 기업의 부채는 여전히 금융권의 뇌관으로 남아있음
-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11~2012년간 상환대상 부채가 423억불에 달해 제2의 두바이월드 사태 재연 가능성 우려

[두바이 정부 및 정부 관련 기업의 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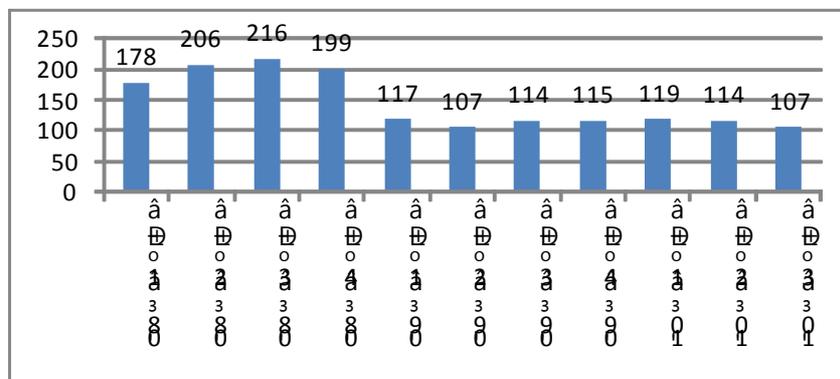
Total	Debt Falling Due				Debt
	2010	2011	2012	Beyond	
Dubai World	4.9	6.2	6.9	5.5	23.5
o/w: Standstill Debt	4.9	4.8	1.9	2.8	14.4
Dubai Holding	3.5	3.2	0.8	7.2	14.7
Investment Corp.	2.0	5.8	5.7	7.0	20.5
Other Corp.	4.9	8.8	4.9	6.0	24.6
Government	0.0	0.0	0.0	29.0	29.0
TOTAL	15.3	24.0	18.3	54.7	112.3
Memo: GDP	83.5	85.0	88.8		

자료원 : IIF, GCC Regional Overview, Oct 2010

○ 부동산 초과공급

- 부동산건설업체 Colliers Int'l에 따르면, 신규 부동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초과공급으로 2010년 2분기 이후 UAE 부동산 가격하락 지속
- 두바이의 경우 2010년 3분기말 기준, 주택 입주율이 87%인데다 2010년 말 까지 신규 분양될 33,000가구가 가격하락 압박요인으로 작용

[두바이 House Price Index(HPI)]



자료원 : Colliers International House Price Index '10.3분기 보고서

- 두바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제도 개선, 주택금융 확대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

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외국인 유입율과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UAE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

□ 에너지 과소비 전기·전자제품 판매 불허

- UAE 환경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현행 대비 최대 30%까지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제품만 판매 허용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에너지 절감법 제정,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UAE 두바이는 이미 2010. 7월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중점을 둔 그린빌딩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부다비도 2011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건설규정을 마련 중

□ 두바이, 전기 및 수도요금 인상

- 발전연료인 수입가스 가격인상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두바이의 전기 및 수도요금이 14~16% 인상되며, 국제유가변동에 따른 추가요금도 부과
- 두바이의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08. 3월 이후 처음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 요율은 발표되지 않았음

□ 2011년 주요 행사

- WFES(World Future Energy Summit) 개최
 - 2011년 4회째를 맞는 WFES는 인류의 당면과제인 에너지 문제해결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정책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산업전문가, 투자자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 '탄소제로 마스다르시티'를 조성중인 마스다르(Masdar)사가 주관하는 'WFES 2011'은 1월 17~20일간 아부다비에서 개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병행 개최
 - 동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기업 약 30여 개사도 한국관을 구성, 참가 예정

- WFES 2011은 '미래에너지 솔루션의 활용'을 테마로 에너지정책 및 전략, 비즈니스, 기술, 금융 및 투자 등 4개 분과로 구성, 운영

[WFES 2010 전시회]



○ WEF(세계경제포럼) Global Agenda Summit 개최

- 주요 안건은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안보 등 글로벌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인 해결방안도 도출
- 2008년 출범한 동 회의는 WEF 산하기구로 총 72개의 협의회로 구성되며, 약 60여 개국에서 700여명의 각 분야 리더들이 매년 두바이에 모여 회의 개최

[제4회 Global Agenda Summit 총회]



나.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본격적인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시대 개막

- 사우디 정부,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연구원(KACNRE)”을 공식 발족예정 (“11.1분기 중)

- '10년 4월 왕의 칙령에 의해 발표된 동 연구원 설립은 그간 몇몇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활동 및 권한 등을 일원화함에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사우디는
 - 원전도입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
 - 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11년에는 BOT 형태로 Pilot Project가 발주될 예정
 -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FIT(Feed in Tariffs)안이 KACNRE의 출범으로 근시일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개발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

□ 사우디, 122개 품목 관세 인하 실시

- 사우디 정부는 2011년부터 122개 품목의 관세 인하 결정
 - 화학제품, 향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 제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7.6%~25%에서 5.5%~6.5%로 인하
 - 에어컨, TV, 핸드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한국산 제품 판매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관세 인하로 생활용품, 미용제품 등의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우디는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2005년 472개 품목, 2007년 22개 품목, 2008년 180개 품목, 2009년 20개 품목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 인하 추진

다. 이란

□ 에너지, 식량 등 생필품 보조금제도 폐지

- 2010년 12월, 이란 정부가 20년 간 논의되어 왔던 보조금 폐지정책의 시행이 발표됐으며, 2011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 휘발유 4배, 가스 7배, 전기 1.7배, 물 2.5배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생필품 보조금의 폐지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경제, 시장구조의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보조금폐지에 따른 주요 가격변화 비교]

품목	기존가격(리얄)	신규가격(리얄)	증가율(%)
휘발유(일반)	4,000	7,000	75
휘발유(고급)	5,000	8,000	60
CNG(차량용)	400	3,000	650
경유	165	3,500	2,021
등유	165	1,000	506
중유	98	2,000	1,940
항공유	1,400	4,000	186
가스(가정용)	100	700	600
전기	165	450	173
물	800	2,830	254

자료원 : Ettelaat(이란어 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 2010년 10월부터 서민층에 1인당 약 월 40달러의 현금을 직접 보조하기 시작했으나, 경제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보완하지 못할 전망
- 이란 의회의 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을 약 20~70%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정부가 보조금 폐지로 생기는 재원의 30%인 약 150~300억불을 에너지소비 효율화에 투입 계획 발표. 전력·수처리·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기업은 대규모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예의 주시 필요

라. 이집트

□ 이집트 인프라 사업 분야 민간 사업자 확대 예상

- 2010년 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 법안 통과
 - 지난 2010년 4월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투자(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안이 이집트 하원(P/A)을 통과함으로써 이집트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인프라, 하수처리장, 전력 등 SOC 인프라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2011년부터 이집트 PPP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집트 인프라 사업에 공급자 금융조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동 조치는 점차 심화되는 이집트 부채증가와 재정악화 상황에 따라 PPP 방식을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펀딩 소스로 활용하고 민간 효율성을 활용하여 이집트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 2010년 총선에 따른 2011년도 대선 영향

○ 2010년 이집트 총선 결과

- 2010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집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 무소속 당선자 상당수 국민민주당 입당 예상에 따라 국민민주당 전체 의석 점유율은 95% 상외 전망

○ 2010년 총선에 따른 2011년도 대선 영향

- 집권야당 국민민주당의 견제 세력 미미로 인해 국민민주당 출마자(현재 대통령인 후스니 무바라크 및 그의 차남인 가말 무바라크)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권이 이양될 것이라는 현지 전망

○ 2011년 대선, 이집트 정치/경제의 Turning Point

- 정치적 혼란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악화 우려(Political Risk ↑ 가능성)
 - 정권 이양 등 반대 시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고조 예상
 - 정치적 혼란에 따른 이집트 비즈니스 환경 악화 우려
- 안정적인 정권 이양에 따른 親외국인 정책 지속
 - 집권 여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친 외국인 정책 지속 가능성
 - 주요 정부 공약 사업(PPP, 원전 등) 계획대로 추진

마. 시리아

□ 시리아 전력시장 개방

○ 시리아의 전력 시장 개방 정책으로 2011년 상반기 시리아 최초 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선정 예정

- 2010년 12월 11개국 16개 업체가 사전 자격 심사 단계 통과, 2011년 상반기 최종 선정 예정, 180~250MW 규모의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 참여
- 시리아 전력 수요는 연간 6~8%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800MW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 필요
- 2010년 하반기 발전 및 송전 부문 민간 부문의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2011년 시리아의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업체 증가 전망

□ 재생 에너지원 발전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발전량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 중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프로젝트 투자 증가 전망

- 800MW 규모 풍력 발전소에 5억 유로를 투입하고 나머지 5억 유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2,500MW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 및 총 3,000MW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보유 계획

□ 해운항만부문의 투자 통한 물류허브 비전

○ 시리아는 제11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해운 항만 부문에 미화 8억 불 투자 계획

- 시리아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시리아 접경국인 이라크의 재건 사업으로 인한 시리아 항만 이용 수요 증가로 항만 시설 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가 필요
- 정부는 향후 5년간 라타키아(Lattakia)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신규 선박 구매, 기존 드라이 독 개선 및 두 곳의 신규 드라이 독 건설 등을 계획
-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06-2010)동안 해운 항만 인프라에 투자된 미화 2억불 대비 제11차 계획에서는 이 부문에 미화 8억불 투자

○ 시리아 정부는 라타키아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까지 화물 처리 능력을 20ft 컨테이너 기준 250만대, 2천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향후 중동 지역의 물류 허브로 개발할 계획

바. 알제리

□ 2011년 보충재정법과 폐쇄적인 경제정책 지속

- 2009년 부트플리카 대통령의 3선 성공 이후 제 3차 5개년 계획(2010~2014) 구상 및 실행 중
 - 총 1,500억불의 예산을 5년 동안 집행할 계획으로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 상당 부분은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알제리 경제구조 개혁 일환으로 알제리 산업발전에 투자될 예정
- 알제리 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들이 이어지게 되어 폐쇄적인 시장구조 지속
 - 외국 기업 투자 시 지분의 49%까지만 보유 제한
 - 공개입찰 시 최종기업 선정과정에서 알제리 기업에 대해 25% 가격 특혜 부여

사. 오만

□ 오만, 본격적 경기 회복 시작

-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 2011년부터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
- 2011년 실질 GDP 성장률 4.1% 전망
 - 2009년-2010년간 오만 경제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다변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2011년 재정수입, 전년 대비 14% 증가 전망
 -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공항, 도로, 항만 및 발전 부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아. 이라크

□ 이라크 신내각 구성으로 주요 정책사업 순항 전망

○ 2010년 3월 7일 총선거 이후 9개월 이상 지연되어온 이라크의 新내각 구성이 12월 21일 마무리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요 정책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 서민 주택건설사업(200만호), 전기 공급 부족에 따른 발전소 건설사업, 제철소 건설사업 정부에서 적극 추진 예상

○ 이라크에서 채굴된 석유를 수출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한 송유관 설치 등 프로젝트 사업, 이라크 국경 및 바그다드 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시스템 설치 등 사업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진출 유망

자. 이스라엘

□ 소비자 현금 환불 제도화

○ 이스라엘은 2010년 12월 14일 현금 환불법(Money Refund Law)을 발효.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

- 이스라엘 정부는 동 제도를 향후 6개월간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후 재정비할 계획

차. 쿠웨이트

□ 한국-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발효 예정

○ 한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는 양국 간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2000년 6월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체결

- 동 협정의 2011년 1월 1일부 발효를 위해서는 최종 행정 절차로 쿠웨이트

- 외무부의 한국 정부에 통보절차가 필요하나 현재 공식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협정 체결 후 쿠웨이트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 역외부문 과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쿠웨이트 진출환경 개선과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향상 전망

카. 모로코

□ 개도국 간 특혜관세 부여원칙 (GSTP) 협정 체결로 한국산 진출 기회 확대

- 모로코는 2010.12.15 브라질에서 개최된 남미 공동 시장(메르코수르) 각료 회의에서 GSTP 협정에 서명하고, 협정에 서명한 11개국 간 교역제품의 약 70%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20% 감축하는 내용의 양허안 제출
- 모로코의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산 주력수출품인 타이어(현행 수입관세 35%)와 냉장고(35%, 17.5%), TV(5%), 세탁기(5%)등 가전제품의 수입관세가 현행대비 20% 인하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타. 요르단

□ 수입중고차 연식 10년 이내로 제한

- 오래된 중고차 수입으로 인해 높은 교통 사고율과 공해 발생 초래
 - 신차 딜러들의 연식(3~5년) 규제요구 일부 수용
- 총리 지시로 자문위에서 연식 10년 미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출
 - 중고차 수입 규제는 10년이 넘지 않는 연식으로 제한하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각종 공과세 50% 감면 건의
 - 수입 금지 품목인 디젤 승용차, 연식이 3년을 넘지 않을 경우 수입 허용 건의
- 2011년부터 2001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 수출 불가
 - 요르단 바이어들은 2000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을 주로 구입하므로 큰 타격은 피할 수 있으나 1990년대에 출고된 중고차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9

아프리카

가. 수단

□ 수단, 남부 수단 분리 독립 전망

- 2005년 체결된 포괄평화협정(CPA)에 따라 내년 1월 초 남부 수단 분리 독립 여부에 대한 남부 수단의 국민투표 실시
 - 현재 여론은 독립 지지가 압도적, 국민투표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남부 수단 분리 독립 확정 예정
 - 북부 수단의 국민투표 방해 공작 및 투표 후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내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예정 수순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중 남부 수단이 별개의 국가로 독립할 전망
- 수단 남·북부가 별개 국가로 독립할 경우 북부 수단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남부 수단은 각종 사회 간접 자본 개발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전망

나. 케냐

□ 동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확대

- 동아프리카 지역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삶의 질과 산업 발전 수준이 매우 낮음.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향후 인프라 개발의 여지가 크고 향후 인프라 시장의 확대가 예상 된다고 할 수 있음
- 동아프리카 주요국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는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우간다 등은 신정부 출범(탄자니아 2010년, 우간다 2011년)을 기점으로 인프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 남아공

□ 남아공 정부, 정부 탄소세 제도화 초안 승인

- 남아공은 오염 유발 인자에 세금을 부여하는 환경세(Environmental Tax)를 시행한 이래, 2010년 12월 9일 탄소세(Carbon-Tax) 초안 승인
 - 탄소세 제도화를 통해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방출 34% 감소, 2025년까지 42% 감소 목표

- 동 법 시행 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에너지 개발 본격화 전망 .끝.

작성자

◆ 프랑크푸르트 KBC	김연재 과장	◆ 나이로비 KBC	유성원 과장
◆ 파리 KBC	김영호	◆ 카르툼 KBC	송방달 차장
◆ 암스테르담 KBC	박병국 과장	◆ 도쿄 KBC	임지훈 과장
◆ 아테네 KBC	하성규 과장	◆ 싱가포르 KBC	유선아 과장
◆ 브뤼셀 KBC	정 철 센터장	◆ 마닐라 KBC	김군기 차장
◆ 헬싱키 KBC	조재은	◆ 방콕KBC	박영선 과장
◆ 이스탄불 KBC	옥중수 과장	◆ 왈리룸푸르 KBC	정영종 차장
◆ 런던 KBC	송지영 과장	◆ 자카르타 KBC	윤여필 차장
◆ 마드리드 KBC	이성학	◆ 호치민 KBC	강준경 과장
◆ 밀라노 KBC	김태형 과장	◆ 시드니 KBC	이희연 과장
◆ 스톡홀름 KBC	조경진 과장	◆ 오클랜드 KBC	정병선
◆ 빈 KBC	이도형 과장	◆ 뉴델리 KBC	이해인 과장
◆ 취리히 KBC	이민호 차장	◆ 카라치 KBC	김한승 과장
◆ 부다페스트 KBC	김중춘 센터장	◆ 멕시코시티 KBC	안성희 과장
◆ 소피아 KBC	임채익 센터장	◆ 파나마 KBC	이 훈 과장
◆ 바르샤바 KBC	신재현 차장	◆ 과테말라 KBC	정덕래 센터장
◆ 부쿠레슈티 KBC	이중선 센터장	◆ 상파울루 KBC	황기상 차장
◆ 뉴욕 KBC	최정은	◆ 리마 KBC	박강욱 차장
◆ 토론토 KBC	손호성 과장	◆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이정훈 센터장
◆ 상하이 KBC	김명신 과장	◆ 산티아고 KBC	성기주 과장
◆ 타이베이 KBC	유기자	◆ 카라카스 KBC	김영식 센터장
◆ 두바이 KBC	박태화 부센터장	◆ 모스크바 KBC	김동묘 과장
◆ 알제 KBC	정현철 과장	◆ 키예프 KBC	김하민 과장
◆ 암만 KBC	조기창 센터장	◆ 알마티 KBC	임채근 센터장
◆ 바그다드 KBC	남기호 센터장	◆ 타슈켄트 KBC	이종섭 센터장
◆ 카이로 KBC	김효근 과장	◆ 구미팀	안유석 과장
◆ 카사블랑카 KBC	이제혁 센터장	◆ 아대양주팀	복덕규 차장
◆ 리야드 KBC	이용진 과장	◆ 아대양주팀	박민준 과장
◆ 쿠웨이트 KBC	김두식 과장	◆ 중국사업단	김신아 차장
◆ 무스카트 KBC	김동현 센터장	◆ 일본사업단	홍승민 차장
◆ 테헤란 KBC	강성수 과장	◆ 중아 CIS 팀	김정훈 과장
◆ 텔아비브 KBC	박은경 과장	◆ 중아 CIS 팀	김지진 대리
◆ 다마스쿠스 KBC	송선근 센터장	◆ 중아 CIS 팀	한석우 과장
◆ 요하네스버그 KBC	김지혜		

Global Business Report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